안철수 "개혁 중도보수 변화…총선 압승·정권 재창출 의무"

安, 정치 선언 10주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강대국 역학구도에 생존 위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치입문 10주년을 맞아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19일 정치입문을 선언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2012년은 역사의 변곡점이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그해, 더 거대한 세력 확장을 꿈꾸는 시진핑·푸틴·아베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안 의원은 "그 후 10년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 탈세계화, 냉전 시대를 연상케하는 블록화, 북한 핵무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극화, 팬데믹, 고물가와 경기침체, 금리 인상으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했다"면서도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 간의 급변하는 역학구도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 '어떤 결정이 더 국익을 우선하는가'가 제 정치적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라며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향후 과제로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 ▲2024년 총선 압승 ▲대한민국 개혁 ▲정권 재창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강한 중도 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수도권 전선 사수 의지가 느껴진다.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승리 후 2년은 골든타임이다. 지난 10년간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공적 책임은 약해지고 공공성은 훼손됐다.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다.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차기 당권과 대권 도전 선언을 공식화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분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했다.

표면적인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결과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에 의해 전당대회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가 갓 출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대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불가능하다. 내년 1~2월 정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중론은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첫 정기국회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10월 국정감사를 제대로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 11월 예산 국회는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로 당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가 판사에게 당의 운영을 맡겼다. 여러 파국적인 상황이 온 이유가 그곳에서 출발한다"고 일갈했다.

당을 향해선 "너무 낙관론에 사로잡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플랜B를 준비하지 않았다. 너무 허술했다"며 "참 진퇴양난이다. 가처분을 받았으니 비대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없애버렸으니 양쪽 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원내대표를 뽑은 뒤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전국위에서 뽑아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 정식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리스크가 더 적다"며 "우리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가처분 결과에 대해선 "재판부 입장은 시간을 줄 테니까 정치적으로 먼저 해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용되면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 최소한의 최고위원을 뽑아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기각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정기국회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윤리위도 추가 징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오는 28일 당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최이슬 기자

尹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과 제77차 유엔총회,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대화하며 악수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군 1호기 트랩 위로 올라가 인사한 후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 후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 출국에 앞서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與 김기현 "민주당, '기승전 김건희'…집단 괴롭힘"

"李 궁지 몰리자 김 여사에 '억카'"

주요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세 집중에 대해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 희'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억지성 카더라)'를 만들어 '꼴진보'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이 세금 낭비였으며,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민주당 의혹 제기에 대해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라고 했던 영빈관을 국격에 맞게 신축하자고 하니 대통령 부인까지 끌어들여 절대불가를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순방 시 부인이 동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만큼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습관성 동행을 해왔고, 때로는 여사의 관광성 동행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의 순방 동행이 마치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마냥 호들갑떠는 모습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하와 폄훼가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사이다 같겠지만, 대다수 합리적 국민들에게는 대선 불복 심리를 괜시리 대통령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듯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비아냥, 음해와 모욕은 민주당의 격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